

조세지출-재정지출 연계 강화

(실: 세제실, 과: 조세특례평가팀, 담당자: 송석하, 044-215-4194, 기여도 60%)
(실: 재정관리관, 과: 재정제도과, 담당자: 김민호, 044-215-5491, 기여도 40%)

I. 추진 배경

-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정부의 지출이라는 본질은 동일함에도 분류체계(세법조문별vs사업별) 및 지출방식(세액감면vs예산편성) 등의 차이로 인해 그간 종합적 관리 미흡
 - 최근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 측면에서도 통합관리 필요성 증가
- * 연평균 증가율('20~'24년): 조세지출 9.9% > 재정지출 6.4%

II. 정책 내용

- “보이지 않는 지출”인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묶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반 구축
 - (분류체계 일원화) 그간 조세지출은 16대 분야별로 산출해왔으나,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·공개(조세지출예산서, '24.8.27)
 - (관리시스템 구축) 조세지출 항목별로 지원대상·목적 등이 유사한 재정지출과 매칭하여 전산코드 부여 및 dBrain+에 데이터 입력
- 정책목적과 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재정 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효과성 비교·점검 기제 마련
 - (유사·중복 검토 강화) 각 부처의 예산요구 및 조세지출 감면 건의 단계에서 유사·중복지출 여부 점검 및 제출 의무화*
 - * 금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반영('24.3.26)
 - (통합심층평가 도입) 조세·재정지출간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(군)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합심층평가 제도 도입
 - *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 중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국가정책의 분명한 기회비용임에도 간과되기 쉬운 조세지출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정책 수립
- ☞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에도 기여

참 고

분류체계 일원화(조세지출 분류체계 16대→12대로 변경)

< 조세지출 재분류('24년 전망치 기준) >

(단위: 억원)

16대 분야 분류		실적		12대 분야 분류		실적
1	일반·지방행정	93,533	→	1	일반·지방행정	93,533
2	공공질서 및 안전	0	→	2	공공질서·안전	0
3	통일·외교	7	→	3	외교·통일	7
4	국방	346	→	4	국방	346
5	교육	10,460	→	5	교육	10,460
6	문화 및 관광	2,887	→	6	문화·체육·관광	2,887
7	환경	21,824	→	7	환경	21,824
8	사회복지	252,584	↘	8	보건·복지·고용	371,146
9	보건	118,562	↗	9	농림·수산·식품	60,989
10	농림수산	60,989	→	10	SOC	11,203
11	교통 및 물류	8,208	↘	11	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141,834
12	국토 및 지역개발	2,995	↗	12	R&D*	29,839
13	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141,834	↔			
14	과학기술	75	→			
15	통신	0				
16	예비비	0				
합 계		714,305				

*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에 속하는 항목 중복계상 (예: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)

□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세지출(16대 분야) 분류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(12대 분야)과 연계·통합

□ 16대 분야 → 12대 분야

○ 사회복지(252,584억원) + 보건(118,562억원) → 보건·복지·고용(371,146억원)

○ 교통 및 물류(8,208억원) + 국토 및 지역개발(2,995억원) → SOC(11,203억원)

○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(141,834억원) + 과학기술(75억원) → R&D분야 신설(29,839억원)

- 예산과 동일하게 과학기술 분야 외에, 여타 분야 중 R&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